

2023. July

통권

제147호

발행인 김현철 |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 ¹⁾

성윤숙 선임연구위원
문호영 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정부 정책의 발전적 보완과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정책 진단과 정책 제언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자율적 주체적 삶을 설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복지), 그리고 생산적 고용의 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1차년도(2022년)의 '교육 분야', 2차년도(2023년)의 '복지 분야', 그리고 3차년도(2024년)의 '고용 분야'로 구성하였음.
- 첫째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분류 및 정책 진단 틀 마련 등 3개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먼저 마련하고, 다음, 교육 분야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문헌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과 워킹그룹 운영, 2차 자료 분석, 설문 조사, 그리고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였음.
- 연구 결과로, 취약계층 청소년은 발생영역에 따라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지리, 개인의 여섯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약계층은 엄밀히 말해 '일시적 취약상황'으로 보아야 하고, 취약성의 원인이 복합적, 다층적임.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아니라 '잠재적 미래 융합 인재'로 보고, 제도적 지원 역시 '단순한 보호'가 아닌 '적극적 인재육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정부 정책을 진단한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나(경제 21개, 문화 영역 22개, 가정 영역 43개, 학교 영역 44개, 지리 영역 14개, 개인 영역 22개) 대부분 시혜적, 사후 대응적, 단편적이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복지, 고용 전 분야 정책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지속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4개 정책영역에서 28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협동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을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취약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권리를 부여받을 정책의 실질적 구현과 정착이 요구됨.
 - 현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는 적지 않음. 빈곤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정폭력·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범죄 가·피해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정책대상자로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는 광범위함.
 - 다양한 부류의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니는 특성 및 니즈(needs)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생산적 정책이 실현될 때, 청소년 개인의 안정적 삶의 설계와 자아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삶의 질 고양은 물론 사회통합과 잠재적 국가 인재 역량의 지속적 발굴과 양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포함한 모든 국가 역량의 결집은 결국 21C 원조 공여국이자 선진 리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매김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그리고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함.
 - 그동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행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음. 2019년 25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282개 청소년정책 가운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는 26.2%(74개), 예산 규모로는 89.8%였고(여성가족부, 2019), 2020년에는 총 273개 가운데 26.4%(72개), 전체 예산의 90.7%였으며(여성가족부, 2020), 2021년에는 총 269개 중 26.4%(71개)로 예산의 94.3%가 분배되었음(여성가족부, 2021).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행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개발과 함께, 기존의 정책 실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요구됨.
- ▶ 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정부 추진 정책의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정책의 발전적, 보완 및 개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신규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은 누구나 자율적 주체적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설계하고,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이자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권리가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복지), 그리고 생산적 고용임.
 - 1차년도(2022년) ‘교육 분야’, 2차년도(2023년) ‘복지 분야’, 그리고 3차년도(2024) ‘고용 분야’의 3개년 연구로 진행됨. 첫째에는 일차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정책의 지속적 진단과 보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확한 이해와 타당성 있는 분류, 정책적 지원의 범위 파악 및 정책에 대한 진단 틀 마련 등을 실행함. 나아가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취약계층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유형 분석,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 및 기존 정책 등을 심층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9~2021년 시행계획 중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사업을 시행부처별, 대상별, 예산 증감을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1~3차년도 분석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미국, 국제기구(OECD, UN, World Bank Group, UNESCO)등 외국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현황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2차 자료 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교육 분야 지원제도 및 정책 작동 점검을 위해 기존에 연구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함. 2차 자료 대상으로 빈곤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경험 관련 실태 분석을 통해 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적 개입 지점을 확인하고, 다문화 지원정책의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교육성취(주관적 성적 만족도 등)에 대한 효과를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하여 평가함.

▶ 설문조사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분야 ‘공정한 출발’ 보장을 위한 정책적 수요 및 지원의 욕구 파악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1,034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연구결과

▶ 취약계층 청소년 개념 및 범주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유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지닌 전체성의 형식적 정의를 내리면, 취약계층 청소년은 ‘특정한 발생 원인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환경을 누리지 못함으로, 고용을 비롯한 자율적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실현이 불안정하여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임. 이에 따른 실질적 정의는 형식적 정의에 상응하되, 취약계층 청소년의 특정한 상황에 부합하도록 내릴 수 있을 것임.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범주는 발생영역에 기초하여 경제, 문화, 지리, 가정, 학교, 개인 등 여섯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청소년의 취약상황은 특정한 한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 다층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함.



[그림 1] 발생 영역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범주

[표 1] 발생 영역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영역	내용	대상
경제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나 지위로 인해 안정적인 일상의 돌봄이나 교육환경을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나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등
문화	문화적 차이나 이질성으로 인해 문화적 동화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일상의 돌봄이나 교육환경을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북한이탈가족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가정	가정의 구조적 문제, 부모의 신체적 결함, 보호자의 학대 또는 방임 등으로 안정적인 일상의 돌봄이나 교육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입양아, 한부모가정 청소년, 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범죄피해가정 청소년, 실종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나홀로(돌봄)청소년 등
학교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교생활에 내재하는 피해, 불건전한 또래문화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받거나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피·가해 청소년, 비행·범죄 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청소년 등
지리	자의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도시와 분리된 지리적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일상의 돌봄이나 교육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농산어촌 청소년, 도시낙후지역에 사는 청소년 등
개인	당사자의 지적능력이나 장애 또는 사회적 결여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교육적 학습능력이 낮은 경우	장애 청소년(장애, 발달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등), 중독청소년, 정신건강 위험 청소년(자살, 자해, 우울 등), 성매매 청소년, 또래에 비교하여 학업성적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 **국내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전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중 저소득가정의 청소년(21개)과 학교 밖 청소년(20개)이 다른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에 비해 사업 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남.
- 문화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15개)이 북한 이탈가족 청소년(7개)보다 사업 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 영역에서 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0개) 및 입양아(0개) 관련 사업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 영역에서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청소년 관련 사업(1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개인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1개), 성매매 청소년 및 또래에 비교하여 학업성적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각 0개)의 사업은 빈도가 나타나지 않음.
-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수와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교육부는 사업 수 16개에 예산이 3,810,947백만 원이었고, 국토교통부(26,898,315백만 원)는 예산이 가장 많았으나 사업 수(4개)는 적었고, 그에 비해 여성가족부는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수가 36개로 가장 높았음에도 예산이 266,926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대학생 행복 공공기숙사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의 취약·위기 가족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취약·위기 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중복됨. 각 부처별, 발생 영역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경제 영역 21개, 문화 영역 22개, 가정 영역 43개, 학교 영역 44개, 지리 영역 14개, 개인 영역 22개) 각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부족함.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대부분이 시혜적, 문제 중심적, 사후 대응적이며 단편적이라는 제한성을 지님.

▶ **국외 취약계층 청소년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정책대상의 연령 범주의 확대와 내용에 따른 탄력적 적용(policy target and range)
-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는 개념과 호칭에 대한 명료화와 용어에 대한 민감성 확보(policy definition and terminology)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한 성장과 개발을 지향하는 정책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의 새로운 정책비전의 제시(policy perspective and vision)

- 정책영역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틀과 전달체계의 확립(policy framework and delivery system)
- 실질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성과를 담보하는 컨트롤 타워(policy coordination and control tower)의 설치

▶ 취약계층 청소년 영역별 교육 분야 정책 분석

- 경제 영역은 현재 '최저교육비'의 정의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교육급여 대상자의 포괄성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교육급여가 최소지원으로 제한적임. 교육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 문화 영역의 경우 취약계층이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음. 북한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함. 북한배경 청소년이 주로 교육 받는 영세한 규모의 민간 교육시설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가정 영역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나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적 지원이 부족함.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및 교육권이 확실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
- 학교 영역에서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사후 조치가 다수임.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기관의 선택권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음. 교육급여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급여지원 항목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다양한 부처에서 정부 예산의 중복 투입 및 지원 내용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소지가 있음.
- 지리 영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농어촌 교육지원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부의 유사 정책사업이 중복되거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이 두드림 사업 등 다양한 사업대상으로 중첩되는 문제가 있음.
- 개인 영역은 특수교육법에 보장된 장애 청소년 등의 법적 형식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유되고 있지 못함. 기초학력 미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분석

- 교육 내용, 교육 환경, 그리고 실제의 교육 경험 과정에서의 실질적 차별을 배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과정에서의 교육 정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현재의 학교교육 및 관련 제도 속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부적응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실제 다수의 취약요소가 중복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적 지원을 넘어 보다 안정적 생활 여건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령 개선이 필요함. 나아가 현재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체제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학교 밖과 학교의 연계·협력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법제화가 필요함.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인식 및 실태 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명 중 2명 이상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수업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서'(35.4%)와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31.2%)를 비교적 많이 선택했으며 그중 다수는 수업이 '쉽고'(34.5%), '재밌으면 좋겠다'(33.2%)고 응답함.
- 5가지(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시설(서비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교과학습 지도*(32.2%), '기초학습 보충 지도'(29.2%), '수업 상담 및 진로 상담'(28.9%)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선생님' 혹은 '친구'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가정형편(4.1%, 4.2%), 부모님(보호자)의 직업(3.9%, 3.1%), 그리고 학업성적(6.1%, 5.2%)때문인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외국인부모님(보호자)(12.0%, 15.2%), 한부모(9.4%, 8.7%), 그리고 장애(16.1%, 35.5%)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필요한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공정하다'는

항목에서는 모두 평균 3점(그런 편이다)을 상회하는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 결과를 보임. 반면, '나와 우리 집이 힘들면 우리 사회가 도와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는 항목은 평균 3점(그런 편이다)을 하회함.

- 공정한 학교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9가지 개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른들의 공정', '학교 선생님의 공정', '부모님(보호자)의 공정', '학생들의 공정', '학교 운영에의 청소년 참여', '불공정 신고를 위한 건의함 설치',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공정에 대한 교육'의 문항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3점(그런 편이다)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임. 반면, '학교 운영에의 학부모 참여'는 평균 2.88점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및 평가·효과 분석**

- 만8~23세의 청소년 가운데 농촌지역(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45,699명으로 0.6%에 해당함. 농촌에 거주하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86,125명(1.1%),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1,732명(2.5%),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0,369명(2.5%)에 해당함.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20,118명(0.3%),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 42,749명(0.6%),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에 속하는 경우 20,151명(0.3%)으로 나타남. 장애가정에 속하면서 저소득가정인 가구 내 청소년은 97,006명(1.3%)에 해당하고, 장애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 내 청소년은 80,971명(1.1%)에 이른다. 저소득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46,739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6%를 차지함.
-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추정결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 3차,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패널로지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있어 삶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변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빈도를 나타내는 사건은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실직, 부모님의 병환에 해당함. 이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낮은 소득을 갖는 가구 내 청소년이 적어도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함축함.
- 학업성취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내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이 대체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또 교육 관련 취약성은 해당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효성 있는, 증거 기반적 정책 설계와 수립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와 이들의 상대적 취약성 나아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필요한 모든 사안의 체계적, 실제적, 생산적 이해를 위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더불어, 정책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연차별 성과가 평가되고 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정책의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특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역시 극히 제한적임.

4. 정책제언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정책목표, 기본방향, 정책과제 구성**

- 주요 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8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7~2022)」 수립 당시 5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위기 청소년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충분한 지원 미흡'이었음. 이에 따라 제6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위기가

대물림되지 않도록(기회 균등), 위기 청소년보호지원 서비스의 통합성, 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를 강조했음. 하지만 2022년 현재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구축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담당자들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결과물이 필요함. 사회적 관심보다 정책적 관심이, 부분적·개별적 관심보다 전체적·통합적 관심이, 그리고 일시적 관심보다 지속적 관심이 중요함.

- 정책대상과 취약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관련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현재 대부분 정책이 직접적, 현실적 취약상태 개선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임.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부분적, 분절적 정책 대응을 지양하고, 전체적, 체계적, 미래지향적 설계에 따른 포괄적 정책추진을 지향해야 함.

-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구현

- 취약상황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은 그 중복, 중첩, 유사성의 관점에서 항상 점검하고, 일관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및 범위를 재구조화해야 함. 또 취약상황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모든 정책(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및 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임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유기적 전달체계의 생산적 작동을 위해 조정해주어야 함.

- 정책 구현의 지속성과 전체성 확보

-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기존 대로 유지되고 있음.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 실현 안에는 당연히 청소년기의 출발점에서 마침점까지, 평등과 공정의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한 취약성 해소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동시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고용 및 복지를 통한 자아실현의 문제와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성을 실현할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개별성과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정책 실현

- 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개별 청소년” 중심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발전적, 점진적 전환을 통해, 생산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 각자의 현실에 부합하는 상담, 코칭, 설계가 보장되는, 유연성과 섬세함이 겸비된 지원이 필요함.

- 일상성과 융화되는 정책 설계

- 취약성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일상성을 벗어난 특별 사업, 또는 부가적인 업무로 이루어질 경우, 수혜자의 입장에서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외감 혹은 낙인감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일상성에 녹아들 수 있는, 융화 가능한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의 실현이 요구됨.

- 전문 인력 확충

- 현재 취약성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의 개별성을 담보해주면서, 상담, 코칭, 설계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빅데이터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추진

-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추진의 보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격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제시가 기본적으로 필요함. 더불어,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의 장기적 효과 역시 실증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한 증거기반정책은 인적자본의 증가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와 함께 사회적 실용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빅데이터를 통한 체계적, 지속적, 포괄적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 가능성을 포함한 결과 도출이 필요함.

▶ 주요 정책과제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 재정비 및 특별법 제정
 -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개정, 취학 의무 주체를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으로 수정이 필요함.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청소년이 도박과 사행성 투자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중학교 학령기가 끝나는 만15세 다음 해 2월 말까지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개정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의 경우처럼 새로운 법제의 지속적인 등장과 함께 기존 법제와의 중복·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해당 조문을 준용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한 원격교육 활성화 및 디지털 역량 격차 등에 따른 새로운 취약성예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법’) 제4조를 수정하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완해야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취약계층 또는 위기 청소년에 관한 추진체계나 조직, 역할 등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정부조직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사회부총리의 총괄·조정 범위 중 하나로 ‘청소년정책’을 명시할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표 2]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사회·학교·가정의 책임, 적용범위 등, 기본계획수립·운영, 관련 위원회)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지원
제1절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기회의 보장 및 환경의 조성 (급여 등 직접적 지원, 간접적 제한 요소 제거 등 진학포기 요소 제거, 가정·지리 및 문화적 발생 원인에 의한 취약성 제거)
제2절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과정의 형평성 보장 (학교 등에서의 교육경험 차별 배제, 교육내용 차별 배제, 학업중단 등 부적응 요소 제거, 학교폭력·안전사고 등에서의 배제,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방과 후 및 돌봄 정책 등)
제3절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결과의 형평성 보장 (학업중단 학생들 기초학력보장 지원, 학교 밖 학생들의 직업교육·평생교육 지원 등)
제3장 집행체제 및 보칙 (주무부처 소속 협력관 지정 및 유사 정책 조율 가능 부여, 재원의 우선 확보 등 법제화 및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협력, 관계기관 간 협력망 구축, 관련 정보의 교류·활용,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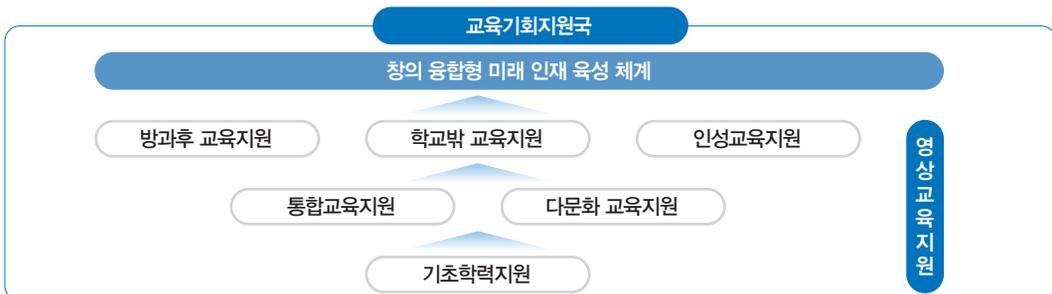
▶ 취약계층 청소년 발생 영역별 지원 체계 정비

- 경제 영역: 합리성에 기초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제언함.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리성 여부 검토, 취약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내용 통합 그리고 교육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보통교부금 교육복지 산정방식 개선을 제언함.
- 문화 영역: 자립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지원을 제언함. 구체적으로 의무교육대상 다문화학생 영역 확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개별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북한배경청소년의 적응 단계, 필요 및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학교 밖 민간교육시설의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그리고 공존과 통합지향적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를 제언함.

- 지리 영역: 공정, 합리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놓여온, 도시낙후지역 교육지원 등 지리적 취약상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세부적으로 공정과 합리성에 기초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선, 전문성 있는 교육복지사 확보를 제안함.
- 가정 영역: 포용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가정 내 교육적 취약성 개선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포용 정책, 실질적 자립을 보장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 그리고 연계성 있는 접근 강화를 제안함.
- 학교 영역: 예방과 다양성의 수용을 기초로 한 학교생활 내의 교육권 보호를 제안함. 세부적으로 예방지향적 정책 설계, 홈스쿨링 등 학교 밖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정책설계를 제안함.
- 개인 영역: 통합과 전문성, 합리성에 기초한 취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제안함. 세부적으로 통합교육의 실질적 내실화, 전문성을 담보한 교육합리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선제적 진단에 따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안함.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전문부서 교육기회지원국 확대 개편**

- '국내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분석' 결과, 국내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 시 누락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소년 사업간 유기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목적지향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의 취약계층 청소년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결과, 미래지향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틀(policy framework)과 정책체계(policy system)의 확립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바, 정책 내용의 틀과 체계의 검토와 함께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 타워(policy control tower) 확립이 요구됨.
 - 외국 사례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부시(George W. Bush) 정부에서 "취약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Task Force)"운영으로 12개 기관 300개 정책 프로그램을 취합하고 상호 조정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기조가 현재까지 지속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교육부가 주관한다는 사실이 확인됨.
-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발생 영역별 교육지원 체계를 안정적, 효율적, 통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교육기회보장과를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기회지원국(가칭)으로 지정하며, 그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함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전문부서가 되어 정책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돌 것을 하나의 가능적 대안으로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청소년 관련 업무 중 교육에 직결되는 것은 이양반도록 함. 일례로 기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업무 중 내일이룸학교 등 진로형이나 은둔형 또는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그대로 두고 학업준비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업무만을 담당함.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도 교육을 제외한 보호·상담·자립 등의 지원은 계속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교육에 관한 것은 기회지원국으로 이양함.
 - 나아가 보건복지부와는 교육복지 관련 업무와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및 교육부와 연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역시 교육업무만을 인계받는 식으로 각 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성할 수 있음.
- 하나의 가능적 대안으로 제시한 교육부 교육기회지원국의 조직 구성과 지원 업무는 방과후지원과, 학교밖교육지원과, 인성교육지원과, 기초학력지원과, 통합교육지원과, 다문화교육지원과, 영상교육과를 예를 들 수 있음.



[그림 2] 교육부 교육기회지원국 지원 업무

▶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설립**

-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정형 혹은 비정형의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하고, 그에 따라 증거기반 정책설계를 총괄할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설립 추진'을 제안함.
 - 현재 취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정부 정책에 대한 통일된, 전체적 상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무엇보다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보장을 위한 각 부처와 소속 유관 민관 기관 및 시설의 취약대상 청소년에 대한 통합 DB 구축 정책 도입이 시급함.
 - 실효성 있는, 증거기반 정책 설계와 수립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와 이들의 상대적 취약성 나아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필요한 모든 사안의 체계적, 실제적, 생산적 이해를 위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더불어, 연차별 성과가 평가되고 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정책의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특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역시 제한적이며 또 분산되어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개방과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자료에 대한 이용자-특히,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별적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 상호 개방과 연계를 이뤄냄으로,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음. 나아가 자료 간 중복된 항목의 조사를 지양할 수 있고, 중복된 항목들에 대해 조사 간 차별화를 통해 세분화된 문항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충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파악, 분석, 진단이 체계적이고 면밀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래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정확히 주어질 때, 정책설계와 실행의 생산성이 담보될 수 있음. 따라서 정형 혹은 비정형의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성윤숙, 2021).
 -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조사자료의 상호 개방과 연계 혹은 자료 간 조정과 같은 통계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책제언이나 사업에 대한 제안들을 정책 데이터뱅크의 형태로 구축 및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관련 연구자, 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 혹은 일반 국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증거 기반 정책 혹은 사업 수립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김양중 외, 2021).
 -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산재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특화된 자료의 생성 및 유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복지, 고용 등 제반 영역의 취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 설계, 시행과 함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산하에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는 정형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및 반정형데이터 전체를 포괄하여 확보하고, 정책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부문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 효과적 정책 수립이나 실행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와 이들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교육격차가 청소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청소년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생산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항
 - 개인정보 보호(protection)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의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한 입법의 경우 2019년 미국에서 통과된 OPEN 정부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을 참고할 수 있음.²⁾
 -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도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청소년 빅데이터의 건설적, 생산적 구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기관의 핵심 가치
 - 윤리성: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는 자율과 책임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삶을 위한 생산적, 미래지향적 연구를 지향함.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익명화, 엄격한 통제 및 모니터링, 윤리와 타당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공익과 합리적 생산적 유익의 관점에서 지속적 점검을 수행함.
 - 독립성: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는 독립기관으로 존재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음.
 - 연관성: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제반 필요와 연관되어 있음. 즉 잠재적 미래인재로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개선, 잠재적 역량 개발, 긍정적 환경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미래지향성: 취약계층 청소년 삶의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지님.
- 조직과 업무
 -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는 ① 센터의 제반 업무를 이끌 리더십 위원회와 ② 연구주제 및 방향 설정,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프로젝트 설계를 담당할 프로그램 위원회, ③ 전체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회, 그리고 ④ 연구의 공익 기여 및 정책 활용성 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담당할 연구위원회, 마지막 ⑤ 데이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할 교육위원회의 다섯 부서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그림 3]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위원회 업무

- ▶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는 결국, 고용문제와 함께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1차년도(교육) 연구는 2차년도(복지) 및 3차년도(고용) 연구와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그래야 청소년의 생애주기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임.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간단히 그림으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2) OPEN 정부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174/related-bills>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정책목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연계, 협력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구현 개별성과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정책 실현 전문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대상과 취약성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 접근 정책 구현의 지속성과 전체성 확보 일상성과 융화되는 정책 설계 빅데이터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재정비 및 특별법 제정		
	1-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의 재정비		
	1-2.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원격교육 활성화 및 디지털 역량 격차 등에 따른 새로운 취약성예의 입법적 대응		
	1-3. 교육복지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한 국가 수준 거버넌스 체제의 법적 기반 구축		
	1-4.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제화		
	2. 취약계층 청소년 발생영역별 지원 체계 정비		
	2-1 경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성에 기초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1-1. '교육급여'의 합리적 배분 2-1-2. 지원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리성 여부 검토 2-1-3. 취약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지원 2-1-4.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내용 통합 2-1-5. 교육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보통교부금 교육복지 산정방식 개선 	
	2-2 문화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지원 2-2-1. 의무교육대상 다문화학생 영역 확대 2-2-2.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개별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2-3. 북한배경청소년의 적응단계, 필요 및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2-2-4. 학교 밖 민간교육시설의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2-2-5.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2-2-6. 공존과 통합지향적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 	
	2-3 지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합리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어촌, 도시낙후지역 교육지원 등 지리적 취약상태 개선 2-3-1. 공정과 합리성에 기초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선 2-3-2. 전문성 있는 교육복지사 확보 	
	2-4 가정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가정 내 교육적 취약성 개선 2-4-1. 공공자 아닌 수용자 중심의 적극적 포용 정책 2-4-2. 실질적 자립을 보장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2-4-3. 연계성 있는 접근 강화 	
2-5 학교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과 다양성의 수용을 기초로 한 학교생활 내의 교육권 보호 2-5-1. '교육급여'의 합리적 배분 2-5-2. 지원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리성 여부 검토 2-5-3. 취약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지원 		
2-6 개인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 전문성, 합리성에 기초한 취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2-6-1. 통합교육의 실질적 내실화 2-6-2. 전문성을 담보한 교육 2-6-3. 합리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2-6-4. 선제적 진단에 따른 대상 맞춤형 교육 		
3.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전문부서 교육기획지원국 확대 개편			
3-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전문부서 교육기획지원국 조직 및 기능 확대			
4.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설립			
4-1. 증거기반 정책 설계를 총괄할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설립추진			

[그림 4]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정책목표, 기본방향, 정책과제 구성의 체계도

참고문헌

김양중, 임준홍, 이관률, 이민정, 김영수 (2021). 충남연구원 데이터뱅크 구축방안(정책아이디어 구축을 중심으로). 충남: 충남연구원.
 성윤숙 (2021). 뉴노멀시대의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방안.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2(2), 35-42.
 여성가족부 (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OPEN 정부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174/related-bills](https://www.congress.gov/bills/115th-congress/house-bill/4174/related-bills)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